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가능한가?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을 돌아보며

일시 2023.08.16 수요일 16:00

장소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

윤건영교육감 1년 평가토론회 준비위원회

○ 목 차	1
○ 발표 순서	2
○ 발 제 문	3
○ 토 론 문		
토론1.		
학부모 단체에서 바라본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 충북교육 이대로 안된다!	15
토론2.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취임 1년을 돌아보며	19
토론3.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24
토론4.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충북교육감의 존재를 잊었다	31
토론5.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35

■ 윤건영교육감 1년 평가토론회 발표순서

프로그램	발 표 자
인 사 말	홍성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강창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진 행	한영욱 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 사무국장
발제	이동갑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토론1 학부모 단체에서 바라본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 충북교육 이대로 안된다!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사무국장
토론2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취임 1년을 돌아보며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
토론3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수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실장
토론4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충북교육감의 존재를 잊었다	김성문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제도개선위원장
토론5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박명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지부장

충북교육,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은 가능한가?
- 윤건영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

2023. 8월 16일 16:00~18:00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대회의실

강사 Profile: 이 동 갑

교육학박사(Ph. D)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현) - 교육디자인네트워크
-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현)
-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현)
- 한국상담학회 초월영성상담학회 총무이사(현)
-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장(전)
- 청주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전)
- 한국상담학회 상담정책위원장·윤리위원(전)
- 한국학교상담학회 초등상담위원장(전)
- 한국교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중앙교육연수원강사 등
- 한국상담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슈퍼바이저 등



생각거리 하나. **교사의 죽음**



생각거리 2.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것 만으로**



발표순서

01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

02

충북교육의 현주소

03

충북교육의 지난 1년

04

살리는 교육과 죽이는 교육

05

경쟁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I. 미래 교육이란 무엇인가?

1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 William Gibson

10년 후 일자리의 60%는 아직 탄생도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신입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김성천 외, 미래교육이 시작되다, 2018:33)

AI, 챗 GPT - 질문하는 능력 /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이혜정, 2014)

2023년 세계대학순위 56위(THE: Times Higher Education), 단순 암기 능력은 미래 역량이 아니다.

2017, G20 정상회담 :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 한국기자에게 질문(중국 기자가 대신 질문)
질문 없는 학교, 질문 없는 교육이 미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북 교육의 지난 1년 - 미래로 가는 진보의 발걸음인가? 과거로의 퇴보인가?

I. 미래 교육이란 무엇인가?

2



성장 마인드셋: 캐롤 드웁, 1990년대 주장

로베르타 콜린코프, 케시 허시파섹, P21(The Partnership for 21 Century Skills)

II. 충북교육의 현 주소

1

대전·충북교육청, 공약실천계획 평가 SA 등급

✎ 지영수 | © 입력 2023.04.17 18:06 | © 수정 2023.04.17 18:11 | 📄 댓글 0



대전 공약수 전국 2위·충북 갯춤성·민주성·투명성 '우수'
 세종 국책사업 전국 최고·충남 공약이행 재정 전국 3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교육감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2023 전국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평가 항목은 갯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 일치도 (Pass/Fail)로 35개의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해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SA 등급을 받은 곳은 대전·충북·경주·강원·경남 등 5곳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갯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II. 충북교육의 현 주소

1

지역	총 공약수	신규여부		지역	총 공약수	신규여부	
		지속	신규			지속	신규
서울특별시	70	37	11	강원도	83	24	59
부산광역시	75	53	22	충청북도	46	29	17
대구광역시	65	19	46	충청남도	65	31	34
인천광역시	111	51	60	전라북도	73	42	31
광주광역시	66	6	49	전라남도	30	10	20
대전광역시	112	107	5	경상북도	54	36	18
세종특별자치시	55	20	35	경상남도	41	28	13
경기도	169	79	90	제주특별자치도	50	19	29

총 공약수가 46개로 16개 시도 가운데 14위

- 신규사업이 17개(36.96%). 전체 11위이고 재선교육감을 제외하면 부산 29.33%에 이어 신규사업비율이 가장 적음
- 기초학력이 1번 공약이지만 그에 따른 재정투자는 부족함(재정규모 순위 10대공약에 포함되지 않음)
- 계획이 SA등급, 앞으로 이행에 대한 평가가 중요

II. 충북교육의 현 주소

2

가정통신문
2023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안내

학생, 학생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자치미래학교

학생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3. 충청북도교육청 행복씨앗학교 단계적 운영 방안과 재교 학생 수의 자연 감소에 따라 2023년도 성화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와 같이되고 전체 학급 수는 12학급 감소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표 참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화초의 모든 교직원들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학생 중심 성화교육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2년도 학급 수 및 학급당 평균 학생 수

학년	1	2	3	4	5	6	총 학급수
학급 수	5	5	6	7	7	8	38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약 18명						

○ 2023년도 예상 학급 수 및 학급당 평균 학생 수

학년	1	2	3	4	5	6	총 학급수
학급 수	3	4	4	5	5	5	26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약 23명						

2022. 11. 23.
성화초등학교장

청주 수곡중·한솔초 학부모 “교원 감축·학급 축소 반대”

한정환 기자 | 입력 2022.12.01 19:36 | 댓글 0

“지역 교육 후퇴” 반발...한솔초 교장공모제 시행도 촉구
“충북교육청 ‘학생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



청주 수곡중학교 학부모회와 한솔초등학교 학부모회는 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원감축 계획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II. 충북교육의 현 주소

3

전교조충북지부-충북교육발전소, 5일 성명 발표

목 유음기사

- 대놓고 사교육업체 불러들인 충북교육청
- 온건영 충북교육감의 '이해불가'한 정책 및 가치
- 외형 구족한 나열...교육내용과 학생은 없어
- 세 기반 충북에듀테크시스템을 아시나요?



지난 3일 온건영 충북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천재교과서, 충북교육청과 MOU.. “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교육 전환 본격화”

장인화 2023년 7월 5일



III. 충북 교육의 지난 1년

1

충북 교육 기본 방향

함께 행복한 교육

신나는 학교

- ▶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 ▶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 ▶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 ▶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 ▶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충북 교육 기본 방향

함께 행복한 교육

신나는 학교

-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민선6기

민선7기

III. 충북교육 기본 방향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를



민선8기

Ⅲ. 충북교육 기본방향



5대 핵심공약과 46개 추진과제

1. 학교교육의 정상화

- 스마트 기반 평가를 통한 학생성장 맞춤형 지원
-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회복 지원

2.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민주시민교육

- 充BOOK(충북)운동으로 전인적 인성교육 강화
-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 지원
-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세계시민교육 내실화
- 함께 어울리는 교육문화 조성

3.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

- 사이언스 엘리트 파워 인재 양성
- 노벨 프로젝트 추진
- 미래 글로벌 리더 양성
- 세종대왕 창조학교 운영

4.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 유아교육 지원과 돌봄교실 내실화
- 건강한 학교 만들기
- 교직원 복지증진
- 전문성 있는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사회통합 특수교육

5.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 온마을 배움터 운영
- 학교 공간 혁신 및 소규모학교 지원 활성화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교육 강화
- 협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운영



Ⅲ. 충북 교육의 지난 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이나 간담회, 공청회, 협의체 운영 시에는 교육 3주체 및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 (전체 의원)

교육청 직원의 계속된 성 비위 발생에 대해 경직된 조직문화와 잘못된 성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대책 수립할 것 끊이지 않는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 경력자 등에 대한 원칙 없는 인사를 개선하여야 함

충북교육행정- 거버넌스 실종, 기관중심 모형으로 충북도, 기초자치단체만 협치에 참여, 민간이나 시민사회, 온 마을 배움터와 같은 지속가능한 교육생태를 만들려는 공약 이행에 의지 부족,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조례 폐지에 무대응

교육행정미숙- 오송초 개축 공용재산 심의 누락, 직원의 단순 실수로 치부: 시스템 문제는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함 교육감실에 소통을 위한 정무역할 담당자가 없음,

단체교육연수원 : 블랙 리스트 사건 (이념에 따른 특정한 집단 혹은 인사에 대한 배제로 교육력 약화)
 단제고등학교 개교 연기에 따른 논란 (교육청의 일방적 개교 연기 결정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처가 큼)

Ⅲ. 충북 교육의 지난 1년 (행복씨앗학교)

3

행복씨앗학교: 학교공동체가 협력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따뜻한 품성을 가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 학교

행복씨앗학교 2.0 (2019~2022)

행복씨앗학교의 질적 성장을 통한 미래교육 모델 확산 및 학교혁신 일반화

"이제는 특정한 일부 학교의 변화를 주도하는게 아니라 충북도에 있는 500여 개의 모든 학교가 단위학교 교장 중심으로 서로 함께 발전할 생각을 해야한다" 며 "역기능이나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저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 "혁신학교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

<윤건영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중>

역기능이나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인 내용의 제시는 충북교육청의 역할. 윤교육감이 말하는 행복씨앗학교지원이 특혜라면 소규모학교지원, AI영재교, 과학고 등 마찬가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핵심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폐기할 수 있지만, 충북교육청의 공식적인 평가도 없고 과정이 일방적이며 학교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가 없음. 경기도는 혁신학교바탕으로 미래학교추진, 길어야 2년 임기 교장중심으로 발전이 가능?

Ⅲ. 충북 교육의 지난 1년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4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를 강조.

- 학력진단 강화를 통해 초3, 중1 전체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
-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되,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반영
- 사실상 초3, 중1학생들 대상 전수 평가를 강요함.
- 시도교육청에 학교유형, 지역규모별 평가결과 제공 및 학교의 성취율 분석자료제공, 학교서열화 가능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 주요공약인 「스마트 기반 평가를 통한 학생성장 맞춤형 교육」 의 일환.
- 올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4년 3월에 정식 개통할 계획.
- 기초학력 진단보정 모듈과 학습유형 진단도구를 탑재하여 기초학력 지도를 지원하고, 학습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를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
- 기초학력의 분석결과제공은 현재도 가능.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학교현장 인력확보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부족.

Ⅲ. 충북 교육의 지난 1년 (기타)

5

도민과 소통? 불통 홈페이지

- 전자공청회게시판 22.09.26 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초안 공개가 마지막 게시물
- 정책토론/설문조사 22.11.28 충청북도 교육행정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이 마지막 게시물
- 정책제안은 국민신문고로 연결됨, 학교업무경감제안은 학교지원기획팀의 학교지원 게시판으로 이동
- 열린교육감실 주민소통게시판은 교육감활동보고 게시판?

- 학교급식 식품비 도단위수준 최고유지 긍정적평가. 단 충북교육청의 예산비율이 높아진 것은 아쉬워. 시군별 친환경급식비 차등 지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수
- 수학여행비 지원, 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 유지 및 확대
- 늦었지만 아이성장 골든타임 지원확대 반가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 그에 따른 인력, 예산 추가확보 기대
- 교육노동자들과의 갈등조절아쉬움. 노사상생협의회 폐지, 인사원칙무시, 교육공무직노조와 임단협 장기화 등
- 충북교육청 '동행 1000인 프로젝트'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되길 바라며 특히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동행이 아니길 기대.

Ⅳ. 살리는 교육과 죽이는 교육

1



IV. 살리는 교육과 죽이는 교육

2



V. 경쟁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1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왜 두려워 하는가?

교육의 이념(목표)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전문개정 2007. 12. 21.]
홍익인간? (1949년 교육법)에서 부터 명시

2022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2022 교육과정 핵심역량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리적 감성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V. 경쟁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2



0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 1. 인간성**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2. 핵심역량**
자기만의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3.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언어·수리력, 디지털·인공 지능 기초 소양 함양,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02 학습자의 실과 성장을 지원

- 1. 진로연계교육**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
- 2. 교과 교육과정**
깊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실과 연계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취 강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
- 3. 고교학점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

V. 경쟁을 넘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3



질의응답



그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머지 않아 사는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Paul Bourget)

학부모 단체에서 바라본 윤건영 교육감 1년 평가 충북교육 이대로 안된다!

조장우(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무국장)

한 언론사와의 취임 1년 대담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작년 6개월 동안은 '우리 교육 이대로 안된다'는 시대의 요청과 소명 앞에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설문조사, 소통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약을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정교화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장과 더 깊이 더 넓게 소통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 스스로는 지난 1년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 도내 전 학교 학교발전 계획 마련, 전국 최초 학교회계 자율 학교 운영, 각종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독서교육 강화 등을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변화의 단초가 있다"도 말하기도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무엇으로 진보일까?’라는 오랜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막을 내렸다. 김병우 교육감의 3선을 저지하고, 5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윤건영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역점 사업은 줄이고, 수월성 교육 강화 기조로 학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 왔다. 충북 첫 대학 총장 출신 교육감, 8년 만의 보수 교육감 취임은 충북교육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 왔다.

<경쟁교육>

- 학력 진단평가(검사) 실시 : 취임 후 첫 번째 결재 사안(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글과 연산으로 시작해 고학년에는 영어까지 포함된 시험, 중학교 진단 과목 기존 국·영·수에서 과학 추가)
-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 '다채움'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 수업에서 온.오프라인 환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다양한 수업 운영 및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지원,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충, (주)천재교과서와 업무협약

<특권교육>

- 영재교육 구상으로 내놓은 '노벨 프로젝트'
- 2027년 AI바이오영재학교 설립 : 지역인재전형을 확대, 충북 다수의 학생들이 AI바이오영재학교에 입학 목표

<불통교육>

- 당선인 시절 면담 요청 거부
-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조례 개정(교육정책자문위원회)
- 아침 간편식

<불평등교육>

- 제천고교평준화 : 교육감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담당 부서 외 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사개최와 참여를 제한, 정치적·이념적으로 프레임화하거나 교육 현장이나 지역 내 갈등 요소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충북교육청

<반민주교육>

-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 학교자치조례 : 민주적 학교운영 핵심 조항이 빠진 조례안 제출, 충북도의회는 이견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없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보류

<무능교육>

- 교원 감축 : 전국 최고 교원 감축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
- 행복교육지구 : 청주시와의 정책간담회.행복지구 업무협약 취소,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입장차이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 운영에 차질
- 단설 상당유치원 : 설립안 부결 후 도의회 통과(개원 후 주변 사설어린이집의 취원율이 낮아지면 사립 어린이집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라는 단서)
- 만5세 초등 입학 : 무대응

<퇴행 교육>

- 공모교장제 : 재검토, 살펴보겠다는 입장(청천중, 한솔초 등 문제)
- 인성교육, 환경교육 : 학교 밖 환경 정화 활동

<전 교육감 지우기>

- 행복씨앗학교 폐지 수순
- 단재고 개교 연기, 교육과정 전면 재수정

<인사 전황>

- 국정교과서 심의위원 경력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학교장을 제천교육장으로 임명, (퇴임이 1년 남은 교육장이 지역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 불가능)
- 캠프 활동 4명 별정직 보은 인사(비서관 겸직과 이해충돌방지법 상충 논란, 정책비서관 임용 5개월 만에 사표)
- 청주고 라인(첫 4·5급 전보 인사 61명 중 청주고 출신이 12명)

<부적절한 처신>

- 학기 중, 집중호우 예보된 상황에서 해외여행

<학부모 정책, 학생인권>

- 없음

윤건영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대적 흐름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충북 미래 교육의 로드맵을 재검증으로 그려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미래교육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쟁, 특권, 불통, 불평등, 반민주, 무능, 퇴행 교육으로 짧은 시간에 충북교육을 분열시키면서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 말로는 공감과 동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광역시·도 안에서 교육감의 교육적 철학과 소신에 따라 유·초·중·고 교육은 크게 좌우되며,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2년 7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보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긍정평가 54.2%를 기록하면서 17개 시도교육감 전체 평균인 48.3%보다 5.9%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직무수행 평가 첫 성적표는 17개 시도교육감 중 4위였다. 하지만 올 6, 7월에 발표된 '2023년 5월, 6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충북도민 역시 교육감의 독선과 충북교육의 퇴행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만들어 온 결과였다. 어렵게 쌓아올린 교육의 성과와 방향이 무너지고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고 행동하면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연대한다면 결국 진보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취임 1년을 돌아보며

김혜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자치국장)

작년 8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2022년 7월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4위에 올랐다. 8년 만에 충북도교육감이 바뀌고 새로운 충북교육정책의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년. 지난 7월 리얼미터에서 진행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충청권 교육감 중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만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1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충북미래교육협치위원회 축소는 결국 지역사회와 소통 축소

- 지난 지방선거 결과 충북교육감이 바뀌고 충북도의회 원내 다수당의 구성이 바뀌자마자 충북도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충북미래교육협치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다. 2020년 설치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전임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으며 충북교육의 주요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교육전문가, 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인 만큼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충북도의회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안을 통과시키며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협치기구에서 자문 기구로 전환시켰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이 기구의 핵심 기능인 ‘심의 조정’이 단순한 ‘자문’으로 변경되었고, 연 4회 개최에서 연 2회 개최로 축소되었다. 심지어 부교육감마저 위원회에서 빠지면서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는 단순 기구로 전락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를 교육 관련 단체로 축소시킨 것이다.
- 지난 수 년동안 나름대로 구축시켜온 거버넌스 체계가 불가피하게 바뀌게 된 것인데 이를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다. 어쩌면 충북도의회와 미래교육협치위원회의 실질적 폐지

조치에 충북도교육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닐까. 충북도교육청은 축소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보완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2. 충북교육청의 공직기강과 조직문화 빨간불

1> 끊이지 않는 성 비위. 강력한 대책에도 무용지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직원의 미성년자와 안마시술소 성매매부터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직원 상습 성희롱, 일반인 강제 추행까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잇단 성비위로 몸살을 앓던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행정기관·공직유권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권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최고 '1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까지 5단계로 이뤄진 평가에서 충북도교육청은 4등급을 받아 도내 기관·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 '2등급'에서 두 단계 추락한 결과이다. 특히 외부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체감도와 정량·정성 평가인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며 체면을 구겼다.

그 후 충북도교육청은 성 비위 교직원 재발 방지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성 비위 사건은 이어졌고 충북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도 커졌다. 충북도교육청의 성범죄 교직원 승진 배제와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급여와 복지 축소까지 내걸었지만 이를 비웃듯 성 사안이 최근 또다시 발생하였다. 지난 6월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한 것이다. 교직원들에 이어, 학교의 성 비위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관리 책임자인 교장의 직위 해제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충북교육청은 성범죄의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2> 허술한 조직 인사 관리와 검증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직원의 전보 인사를 두고 내용을 알기도 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분 받은 이는 인사·감사 부서에서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사무관과 주무관이 감사관실에 배치되었고 특히 한 사무관은 공직 기강과 복무 점검을 총괄하는 직무 감찰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인사·감사 담당 공무원은 음주 운전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인사를 번복하고 전보 조치를 취소하였는데 충북도교육청이 이야기한 강력한 조치가 말뿐이었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위해 충북교육청은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 충북교육청의 조직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조직문화가 느슨하고 해이한 것은 아닌지, 성인지 감수성이 내재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변화에 둔감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조직문화를 진단해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충북교육청 내에서 '성 비위자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공식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우왕좌왕 인사가 아닌 원칙 없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선언이 아니라 행정에서 오류없이 보여야 한다.

3. 행정의 미숙함은 도교육청의 위상 추락으로

1> 행정 실수로 인한 도의회 질책

올해 오송역세권 개발로 늘어난 학생 적정한 배치를 통해 교실 부족,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오송초 개축 사업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이 오송초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황당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오송초 관련 사업은 충북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누락시킨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충북도교육청의 해명이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충북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학생들이 받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충북도의회 '응징'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직원 실수라고만 하기에는 평소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대하는 자세, 예산심의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흡했음이 드러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6월 오송초 증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지만 한차례 있었던 해프닝이라고만 보기에는 충북도교육청의 행정 미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청주시의 교육 확대 두고만 보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

지난 5월 청주시가 교육청의 정책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하며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교육청 정책 간담회와 업무협약은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교

육장이 만나 공동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온 마을 배움터 조성을 위한 행복교육 지구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자리로 정책간담회의 경우 2016년부터 이어온 자리고, 더구나 지난 2월부터 10개 시·군 지자체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를 돌연 청주시가 거부한 것이다. 최근 교육청이 시민사회·교육공동체와의 대화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남은 것은 기관 중심의 소통이것만 이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가 청주시민임에도 청주시가 교육관련 사업에 예산 사용을 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교육청이 감지하지 못했던가? 사실 청주시는 늘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하려 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미루려고 해왔다. 그렇다면 이를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더욱 했어야 했을 교육청이 손놓고 있다 청주시에게 패싱당한 것은 아닌지. 청주시가 교육예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그것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도 저도 교육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보여주기식 행정, 교육청에 대한 신뢰만 잃어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재난이 발생한 시기 충북도교육감은 휴가를 내고 해외를 휴가 중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수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 충북도교육청의 대처이다. 7월 16일(일) 충북도교육청 SNS에 마치 윤건영교육감이 수해복구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의 사진은 7월 12일 “윤건영 교육감, 호우 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철저” 게시물 사진을 재탕한 것이고 윤건영교육감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충북교육청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중인 교육감을 감싸기 위해 SNS 게시물로 도민들을 기망한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이렇게 대놓고 충북도민을 기망하는데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5. 나가며

뿐만 아니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출범 이후 블랙리스트사건, 단재고 개교연기 최근 예비살인자 발언까지 조용할 날이 없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취임 초기 전국 4위였던 순위가 현재 하위권으로 추락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 추진과 소통에 있어 공보다는 과, 명보다는 암이 컸음을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는 충북도교육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혹 윤건영 교육감 눈치보기 급급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교육감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독단적인 의사만으로 여러 중요 사안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고 향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우왕좌왕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에는 외부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고 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은 남은 3년 내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수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정책실장)

세계 경제 위기와 불안 속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날이 도탄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에게는 특혜와 감세 추진, 노동자 민중에게는 노동탄압, 교육개악, 임금·연금개악, 언론 통제 등으로 국정 운영 전반에서 반민주, 반노동, 반교육, 반평화, 반인권으로 치달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1년간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갖가지 논란을 만들며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득권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방어에만 집중하느라 민중의 삶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대선에 이어 치러진 지선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교육감들이 상당수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교육감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감 선거가 기성 정치와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을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의 정치적 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권력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용어라는 것이 확인된다.

충북에서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윤건영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취임한 지 1년이 되어간다. 윤건영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앞세워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의한 인간의 위기, 인간소외를 언급하고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교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공감되는 지점이 있다.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은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
둘째, 인성 시민 교육, 지속 가능한 충북교육으로서 창의·인성의 민주시민
교육실현
셋째, 충북 노벨 20 프로젝트,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 교육
넷째,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교육복지로 계층 간·도농 간 교육의 균형 발
전 도모
다섯째,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도민과 교육 가족의 통합으로 지역사회
와 함께하는 교육이다.

교육의 본질 회복, 민주시민,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라는 용어는 현 사회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담은 미래지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교육청 누리집에 소개된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과 실천 게시판에는 ‘소통과 참여’란도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청의 소통과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실체와 문제점은 상당히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충북교육청의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공감과 동행의 부재가 표면화된 사안을 중심으로 짚어보겠다.

첫째 윤건영 체제는 윤석열 정권과 마찬가지로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은 윤건영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전교조 아웃’을 내건 보수교육감들과 함께 연대 출범식에 참여하여 반전교조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전임 교육감에게 전교조 편중과 인사 전횡이라고 비난하고 전교조에 화살을 돌리며 자신의 정당성을 만들어갔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윤건영 교육감의 전교조 비난과 견제는 전교조가 추구하는 참교육과 노동·인권·생명·평등·평화교육을 부정하며 교육감으로서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이 차별과 배제에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교육주체, 시민노동단체들을 배제하고 교육관료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한 것은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정책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대목이다.

다음은 블랙리스트 사태다. 블랙리스트는 지난 1월 초 김상열 전 단교육원장의 SNS에 폭로되었다. 블랙리스트는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 과정 개설과목에서 행복, 혁신, 노동, 인권, 평화, 통일교육 관련 강사를 구분하고 배제하여 만든 자료다. 또한, 관련 강연 분위기나 조합원의 발언 등을 분석하여 자료화 하

고 보고하는 활동을 하는 모니터단까지 운영한 사찰의 정황마저 포착되었다. 전교조충북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1인 시위를 포함 공무집행 방해 고발, 정보공개청구, 언론대응으로 맞섰다. 그러나 경찰 고발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윤건영 교육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교육청 관료들의 행정 횡포는 막강하였다. 교육청은 행정 권력을 마음껏 활용하여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구성원에게는 서슴없이 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최초 고발자인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을 3월 1일자로 평교사로 전직시키고, 8월 10일 인사발령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강등 조치하였다.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업무 강요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감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비협조로 규정하여 징계하고 해임하는 등 행정 보복으로 마무리하였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건영 교육감의 독단과 비민주성을 경험하며 교육감 자신의 정책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대안교육 탄압과 대안학교 개교 연기다. 기숙형 대안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충북도의회는 지난 6월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 은여울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것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말로 프레임을 씌우고 학부모를 앞세워 언론에 무작정 터뜨림으로써 대안교육을 탄압하고 지우려하는 충북교육청의 방임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 운영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교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교육청이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은커녕 정치적으로 활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준비하여 2024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단재고마저 일방적으로 전면재검토와 개교 연기 발표를 함으로써 교사·학생·학부모·지역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도민 행동을 결성하여 대응하였지만, 시민들의 대화 요구에 불통의 모습으로 일관하며 교육청 방식대로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충북도내 500개 중의 한 개 학교마저도 대안교육을 위해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 입시교육으로 맞춤형 하겠다는 윤건영 교육감의 독단은 입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교육으로 연결된다.

다음 문제는 제천고교평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가장 큰 방해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실시된 이래 적용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입시경쟁교육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어온 역사가 있다. 그런데, 2차 공청회에서 교육청 장학

사의 입시설명회 강사와 같은 설명은 제천고교평준화시민연대 출범과 함께 입시경쟁교육 구도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로 읽힌다. 입시특권교육에 대한 욕망을 공청회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충북교육청의 수준은 이미 공교육 기관으로서 책무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고 도민을 편 가르기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둘째, 윤건영 교육감의 반노동과 반민주적 행정이다. 충북교육청은 2022년 노사상생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해소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노사상생협의회는 2015년부터 7년간 교육정책과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온 노사협 의체임에도 충북교육청은 한마디 양해와 대안도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폐지해 버린 것이다. 노사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육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한 요구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폐지한 게 아니라 지난 9월 8일 노사상생협의회 회의 때 위원 13명 중 9명이 폐지에 찬성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라는 반박을 했을 뿐이다. 결국 교육청은 판단할 테니 교육 주체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노사협력과' 명칭을 '노사정책과'로 바꾼 것은 충북교육청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수준인지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노조 관련 부서를 노사 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부서로 만들기보다 노조를 교육청의 하부 조직으로 두고 행정 전달 통로나 지도대상으로 깎아내리고 노조 위에 군림하려는 불손한 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는 전교조충북지부의 단협 조항을 왜곡하고 노사협의회를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노사정책과 담당자는 2015년부터 진행해 왔던 노사협의회를 2020년 단협 근거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건을 수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창구 단일화를 재촉하며 노사협의회 진행을 훼방을 놓았다. 이것이 충북교육청이 말하는 공감과 동행의 수준이다.

셋째,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의 본질적 철학과 고민 없이 단기적 성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감으로써 교육시장화를 부추기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앞세우는 것이다. 윤건영 교육감의 입시특권교육 몰입과 일제식 평가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교육철학을 보여준다.

교육관련 단체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부터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이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은 일상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학력저하라는 현실적 상황에 맞닥뜨려 학력신장이 학

교교육의 제1책무처럼 되었다. 그러나 학력신장이라는 구호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학생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충북교육청 정책은 너무나 호흡이 짧다. 교육감 취임 후 첫 결재사항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이라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을 만큼 기승전‘학력’에 몰입하고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입시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도입하였다는 것 외에 인간을 보다 존엄하게 하는 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충북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는 정량적 측정을 위한 학력신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학력향상을 목표로 도입하는 AI에 기반한 다차원학생성장플랫폼이라는 이름조차 난해한 정책은 교육 시장화의 단면을 준다. 7월 초, 충북교육청은 천재교과서와 디지털학습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윤건영 교육감의 알팍한 교육철학이 드러났다. AI로봇이 학력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줄 것처럼 학부모에게 선전 홍보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남은 책임은 교사에게 모두 떠넘길 것이어서 코로나 터널을 지나온 교사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력은 시험과 점수로 측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평가’라는 프레임이 학교 현장의 교육을 얼마나 양상하게 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 교육이 교육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민주적 절차 속에서 실현되도록 조력하는 것을 교육청의 역할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정치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고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기계가 지원하는 교육이 지식이 아닌 어떤 지혜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에듀테크 기업만 배불리는 학력신장 정책으로 학교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은 기만이다.

또한,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에 대한 문제다. 충북교육청은 이미 답이 정해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안중에도 없는 사업추진은 학교와 교사를 단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몰아감으로써 공교육으로서 책무성과 공교육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권위주의 부상과 학교민주주의 후퇴다. 지난 5월 학교장 갑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최근 학교장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

이 다수였으며(50.1%) 지부 교권국에도 학교장 갑질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조합원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장 연수에서 교육감이 교장들의 권한만을 강조하고 힘을 실어주려했다는 발언도 암암리에 확인되고 있다. 교장의 권한과 역량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구성원간 갈등 조정을 위해 발휘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이 교장의 권한만을 보호하고 침해해서는 안 되는 치외법권의 영역처럼 섬기고 있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반대급부로 학교장의 권력만 강화시켜 학교 내 구성원들의 무력감만 키우고 있다.

어렵사리 조례로 만들어져 민관이 함께 교육청의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피고 제안하는 통로이자 기구였던 미래교육협치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해버림으로써 민관협치의 장을 축소하고 후퇴시켰다. 게다가, 충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형식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으로 충북도의회가 심의 보류시킴으로써 학교민주주의를 가로막았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충북도의회 힘에 기대어 쉽게 털어내 버린 교활한 수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표면적으로는 존중, 배려, 학교교육 정상화, 각자의 소질 발견,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의 해소, 차별 없는 성장과 사회 통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학교와 마을의 상생,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말들을 내세웠다.

윤건영 교육감은 취임할 때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사자성어 “해불양수(海不讓水)”의 겸허한 자세로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충북교육 갈라치기와 불통 행정, 반노동, 비민주적 행보로 일관하며 교육주체 위에 군림하여 길들이려 하고 있다.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어떤 혁신적인 교육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검토나 교육청의 로드맵만 발표하는 것은 교육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적 흐름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학교의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는 없고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교사정원 감축까지 예고되어 충북의 현장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나날이 악화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의 교사들은 쏟아지는 교육청 지침과 공문 속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정치·노동기본권도 없는 학교에서 부품처럼 소모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노동자 시민과 더 넓게 더 많이 소통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

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다. 노동자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으로 충북교육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

34년의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선 투쟁으로 참교육을 실천하며 세상을 바꿔왔던 전교조는 조합원들과 함께 어떤 투쟁으로 전교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최근 지난 7월 말 서울의 한 초등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의 억눌린 정서와 요구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전교조가 역사적으로 지향해온 참교육의 가치와 투쟁의 기풍을 지켜나가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여 담아낼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장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교육주체와 교육노동자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 윤건영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이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충북교육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노동조합으로서 투쟁의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충북교육감의 존재를 잊었다

김성문(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제도개선위원장)

지방공무원 관련 공약, 단 한 줄도 없다

예비후보 시절 1, 2차 공약을 비롯하여 올 1월 발표한 공약실천계획에도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공약을 단 한 줄도 넣지 않았다. 이는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척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편적인 기준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행정적 집행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을 그저 ‘보조적 역할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속내를 가늠해볼 뿐이다.

적어도 본인이 충북교육의 수장이고, 지방공무원을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노동조건,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한번쯤 관심을 내보일 법도 한데, 생색내기식의 언급조차 없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악, 공정한 인사시스템 훼손

2015년 8월 21일 개정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은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다. 전보내신제도입, 학교근무 의무화, 본청·직속기관·학교의 순환근무가 주요 골자다. 특히 학교근무의무화, 기관별 순환근무 강화에 관한 사항은 학교 등 일선기관 근무를 회피하려는 일부 관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인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선 지방공무원의 형편과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 가능 기한은 6년에서 8년으로, 학교 의무기간은 기존 2~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등 보직관리 기준의 도입 취지와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버렸다. 또, 인사와 감사 담당공무원의 보직 제한 범위를 교육감의 재량으로 정하면서, 입맛에 맞는 인사를 손쉽게 시행하려는 꿈수까지 보였다. 직접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없었다. 충북

교육청지부가 언론을 활용하여 이를 강하게 비판하자 모든 단체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회피하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변명과는 반대로 보직관리 T/F에 노동조합 참여 인원은 양 노조 각각 1명으로 의견을 듣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일방적이었다.

현행	개정안
제5조(인사·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기준) ① ----- <u><신 설></u>	제5조(인사·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기준) ① ----- <u>⑥ 인사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
제9조(순환전보) ① ----- ② <u>본청, 직속기관 및 같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에서 6년 이상</u> 계속 근무한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이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의 경우 각급학교로 전보한다. ③ 임용권자는 <u>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을 7급의 경우 2년 이상, 6급의 경우 3년 이상</u> 각급학교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순환전보) ① ----- ② <u>본청 및 같은 교육지원청에서 8년</u> ----- ----- ----- ----- ----- ----- ----- ----- <u>공무원</u> ----- ----- ----- ----- ----- ----- ----- ----- <u>원은</u> -----.
[별표2] 근무기관우대 <u><신설></u>	[별표2] 근무기관우대 <u>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자</u>

▲보직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행정예고; 2023.5.12. ~ 6.1.)

교육발전의 저해요인, 관료적 조직문화

상명하복의 수직·상하적 관료 체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더욱 돋보이는 건 단순한 우연적 상황일까. 공무원노조가 생겨난 이래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던 조직문화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행정기관 내에서의 조직문화는 상급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기관의 조직문화는 문제의 해

결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보다 여전히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하고, 속이지 않거나 견디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구조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눈치 보기, 줄서기, 업무거르기(승진 등 본인에게 득이 되는 업무만 수행하려는) 등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소통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여지를 만들 수 없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문화가 보수체제일 때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건 그저 편파적 시각일 뿐일까.

소통부재

윤건영 교육감이 당선되고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사무실에는 부교육감 1회, 보좌관이 2번 방문했다. 상호 소통과 의견교환 등을 위한 자리였지만, 정작 중요한 교육감과의 소통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지부장이 정책협약 체결식 자리에서까지 공식적 제안을 했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윤건영 교육감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위상,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무관심인지 무시인지 모를 태도는 윤건영교육감이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건영 교육감의 불통 행보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은 이해당사자, 즉 교육가족과의 사전 소통이 전혀 없었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조직개편이었다. 이 때문인지 이전 교육감체제에서 일선기관(학교) 지원, 조직슬림화 등 뚜렷한 목적이 보였던 과거와 다르게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구성원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실패한 조직개편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윤건영 교육감은 내년 3월 1일자 2차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충북교육정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을 위한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부터 해당 조직개편을 위한 T/F팀 협의가 진행되지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소통 과정을 또다시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권위와 독단의 리더십

윤건영 교육감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색깔은 체제가 자리 잡히기도 전부터 논란과 마찰을 일으켰다. 특히 교육감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는 '강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충북교육계에 큰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고 교육감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단재고등학교의 개교 연기와 교육과정 재설계 과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충북교육청소속 직원이 활동하는 학습동아리의 대관 신청은 두 차례나 거절하고 특정 정치인에게는 허가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대관 방침도 윤건영 교육감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윤건영 교육감, 평가지표 부존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윤건영 교육감을 평가할 지표가 없다. [잘함/잘못함, 긍정적/부정적] 등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이 교육감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전 교육감 체제의 색깔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뚜렷한 방향성이나 목적을 알기 어렵다. 지방공무원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을 교감하며 논한 적도 없고, 지방공무원에 반하는 정책으로 직접 맞부딪친 적도 없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통·교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은 교육감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박명숙(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부지부장)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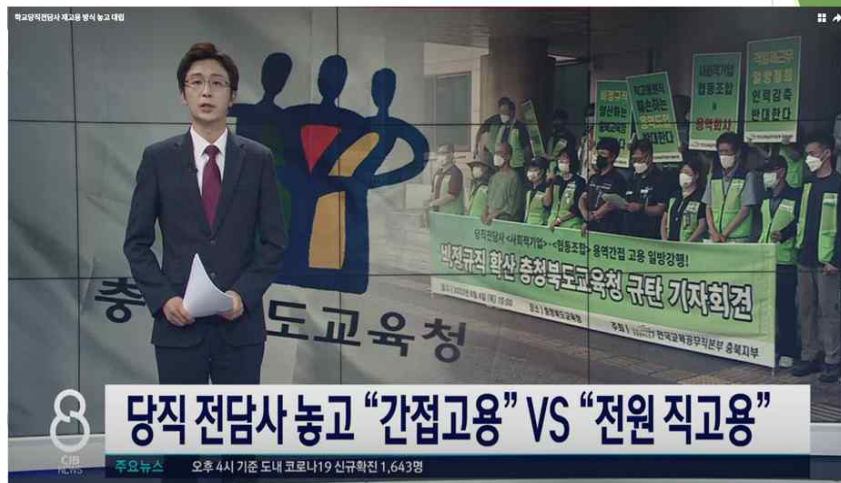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1. [22.8] 학교 당직전담사 교육감 직고용 폐기
2. [23.3] 임금교섭 장기화 국면 교육감 면담 요구 중 폭력, 전격처단, 망언 (42일간 교육감실 앞 농성)
3. [23.3~현재까지] 충일중학교 강제 업무 분장 문제
4. [23.7] 학교급식실 ” 공익필수사업장 지정” 법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시도
5. [22.9~23.8] 환경·당직 고령노동자 정년유예기간 만료 대응 투쟁
6. [23.6~현재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아침간편식 공약 일방추진 반대 투쟁
7. 충북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1. [22.8] 학교 당직전담사 교육감 직고용 폐기

22.8 학교 당직전담사 교육감 직고용 폐기



홈 > 교육 > 일반 교육

학교 당직전담사 교육감 직고용 폐기

충북교육청 '사회적 기업' 등 내세워
간접용역고용으로 전환 시도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확산' 비판
한비노조 '단체현안 주수' 요구도

2022.08.04 17:43:00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4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직전담사 간접고용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충재기자

[충북일보]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학교근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장순임)는 4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포장한 당직전담사 용역 간접고용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8년 용역간접고용 당직전담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뀐 지 불과 4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내세워 당직업무를 용역계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학교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충북교육감 직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됐던 당직전담사들은 아직 학교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이들을 간접고용 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반노동적이고 퇴행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 [23.3] 임금교섭 장기화 국면 교육감 면담 요구 중 폭력, 전력차단, 망언 (42일간 교육감실 앞 농성)

■ 경과

- 2/22(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관련 2차 정보공개 요청
- 3/14(화) 집단임금교섭 수정안 수용촉구 교육감 면담요청 거부
폭력사태 발생, 연좌농성 이어가고 3/23(목)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이전 교육감 면담 요구
(3/22(수) 15:00 확정 후 농성 해제)
총일중 업무분장 관련 사업부서 면담
- 3/21(화) 영어회화전문강사 유형편입관련 사업부서 면담
교육공무직원인사팀 대체전담인력제도 확대문제 협의
양 부서 노숙 요구안 수용 거부로 교육감실앞 농성 돌입
본청 상시전력 제외 전체 **전력차단, 조명 소등**
- 3/22(수) 윤건영 교육감 면담 : 교섭위임 원칙적 입장만 답변.
노사정책과장 <죽으면 책임진다> **생명경시 발언**
총일중 학교장실 점거농성 돌입(3/23 면담전제 해제)
- 3/23(목) 총일중 업무분장 문제 협의조정 거부(총일중학교장)
- 3/24(금) 총일중 업무분장 문제 쟁점사안 교육공무직원에게만 분장하도록 **전체 학교 공문시행**(도교육청)
(학교장 권한 및 교원만 참가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명기)
2022년 집단임금교섭 19차 실무교섭 결렬
- 3/27(월) 7일째 교육감실 앞 농성투쟁 진행중

23.3 교육감 면담요구 농성 중 폭력, 전력차단, 망언

윤건영 교육감 9개월...“노조 유령시 했던 과거로 회귀한 것 같다”

A 회원주 기자 | © 송연 2023.03.27 16:26

충북학비연대, 기자간담회 열고 도교육청 노조 탄압 폭로
농성 중 폭력, 전력차단, 망언, 비민주적 학교 운영 지적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 전혀 없다”...31일 신학기 총파업



■ 폭력상해, 농성장 전원 차단 및 소등조치



■ 생명경시망언

<주요발언 발췌>

(노측) ... 급식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내비두리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청측) 그건 우리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노측)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측) 죽으면 책임지는 거죠 ...

(노측) 지금 노동자들이 자기들 대체 휴가 한번 쓰려고, 아~ 사람 못구하니까 너 빠지게 되면 벌금으로 5만원씩 내 이려고 있어요, 사용자가 당연히 대체자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책임지고 있어요?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

(노측)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교육청측) 이분이 막 그러셨어요, 죽어간다고 그럴 때 사용자가 당연한 책임 인거죠.

(노측) 어떻게 책임져요? 저 급식소에서 일하다가 무기폐 걸렸어요, 어떻게 책임 지실 건데요?

...

(노측) 폐암으로 죽어나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구요?

(노측) 사람이 죽으면 책임지는게 디에요? 살려놔야 할게 아니에요?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관점이 아닌 사후 약방문식의 죽고 나면 책임진다는 발언을 하고나서 사과하지 않고 원칙적인 사용자의 안전보건 책임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책임을 회피

3. [23.3~현재까지] 충일중학교 강제 업무 분장 문제

23.3 충일중학교 강제 업무 분장 문제

충일중학교 조합원이 지난 1년여간 수차례 업무 분장에 대해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교감은 학교의 다른 교육공무직에게는 해당 조합원의 자택을 찾아가서 진단서를 받아올 것을 종용하는 부당업무를 지시했고, 학교장은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교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충일중학교 강제 업무 분장 항의 및 정정 요구와 노동조합연행 시도



충청북도교육청
23.3.24 보복성 재시행 공문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변경, 안내] 2023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1. 관련 학교자과-2356(2023. 2. 21.)
2. "2023.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학교 내 학생 자살위기 발생 시 담당자 역할(예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며, 다량학교에서는 위용 초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학교 내 학생 자살위기 발생 시 담당자 역할(예시)(시행계획 14쪽)

◎ [변경 전](학교자과-2356, 2023. 2. 21.)

위원장	학교 안전관리	자살예방 교육 및 지원관리
학교장	교무부 생활부	담당교사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태파악 시 학교장 교육청 및 외부 기관과 연계, 협조 요청	학생관리 학생관리 심층 상담 및 전문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시뮬레이션 교육	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연계, 협조 요청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시뮬레이션 교육	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연계, 협조 요청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시뮬레이션 교육	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연계, 협조 요청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 [변경 후]

위원장	학교 안전관리	자살예방 교육 및 지원관리
학교장	교무부 생활부	담당교사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태파악 시 학교장 교육청 및 외부 기관과 연계, 협조 요청	학생관리 학생관리 심층 상담 및 전문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시뮬레이션 교육	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연계, 협조 요청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시뮬레이션 교육	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연계, 협조 요청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시뮬레이션 교육	교육청 주관 교육과정 연계, 협조 요청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21.)

담당교사	상담(교)사	생활담당교사
학생관찰	자살징후 학생 심층 상담 및 전문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위험 감지 및 학생 위기관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위원회에 연계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상담, 위기 관리,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자살(자해) 예방교육 실시

비민주적 업무분장 규탄 충주교육지원청 앞 결의대회



해결 촉구를 위한 사업부서 앞 퇴근선전전



사업부서 앞 퇴근선전전 도중 담당부서의 고성 및 폭언 사과 요구 과정 중 도교육청의 경찰신고



<2013.7.19. 노동조합과 인성시민과 협의과정에 교육청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장면>

4. [23.7] 학교급식실 "공익필수사업장 지정" 법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시도

급식 파업시 학생들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 급식실 "공익필수사업장 지정"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국민청원 바로가기
국민청원 하러 가기 >>

- 주관 단체 -
전국17개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초중등교장·교감협의회,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

국민청원신청서

국민청원신청서

동의진행 청원
당신의 제안, 우리의 동의, 함께 하는 입법

■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인정 중 동의완료 위원회 외부 청원

청원분야	안전/생활충/노동		
청원종류	2023-07-22	청원결과	동의완료백기
청원기간	2023-06-21~2023-07-21 09:00~18:00 (시간 300분)	동의수	19,209명 20%

청원인 류**

청원의 취지 급식종사원들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파업 종사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다고 함. 대체 인력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학교급식실은 국가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함.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야 함.

5. [22.9~23.8] 환경·당직 고령노동자 정년유예기간 만료 대응 투쟁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시행중인 축탁직 근로계약조차 수용하지 않고 고령노동자를 외면하고 배척

참고5 2018년 타 시도교육청 응역 직고용 현황

□ 2018년 직고용 전환 기준

시도구분	정년	직고용 전환 조건		퇴직 유예기간 만료	퇴직 후 재고용	
		무기계약	기간제		유예 후 한시운영	축탁 기간제
충북	65	○		2023.8.31.		
경북	65	○		2022.2.28.		
전남	65	○		2023.2.28.	당직 2년	
경기	65	○		2021.2.28.		○
충남	65	○		2021.8.31.		○
대구	65		○	2022.8.31.		
광주	65(청소60)		○	2023.8.31.		
울산	65		○	2022.8.31.		
대전	65		○	2021.8.31.	2년	
강원	65		○	2020.8.31.	1년	
서울	65		○	2021.8.31.		○
부산	65		○	2022.8.31.	당직 1년6월	○(청소)
인천	65		○	2022.8.31.		○
세종	65		○	2023.8.31.		○
전북	65		○	-		○
경남	65		○	2021.8.31.		○
제주	65		○	-	청소 77세까지	
계		5	12		5	8

□ 청소·경비 직종 퇴직후 재고용 현황

전환 조건	정년퇴직(유예기간 포함) 후 재고용		
	없음	기간 설정(1~2년)	기간제한 없음
무기계약직(5)	충북, 경북, 전남(청소)	전남(당직)	경기, 충남
기간제(12)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강원, 부산(당직), 제주(청소)	서울, 부산(청소), 인천, 세종, 전북, 경남

23.8.31기준 558명 일시 집단 퇴사

□ 2018. 9.1.기준 연령별 정년퇴직일 적용 현황

직종 퇴직일	당직전담사					환경실무사					합계
	59세 이하	60~75세	76~79세	80세 이상	계	59세 이하	60~70세	71~75세	76세 이상	계	
2021.8.31.				8	8				3	3	11
2022.8.31.			67		67			38		38	105
2023.8.31.		285			285		273			273	558
정년(65세)	3				3	131				131	134
합계	3	285	67	8	363	131	273	38	3	445	808



■ 윤건영교육감 환경실무사·교사 정년 단순비교 망언



<2023.7.21.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후 노동조합 지부장과 설전하는 윤건영 교육감>

윤건영 교육감 : 얘기해보세요. 그럼 나이먹은 교사들도 만63세면 퇴직해야하는거 다 풀어줘야 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교사나 환경실무사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해온 환경실무사 당직전담사를 정규교사의 정년문제와 비교하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망언으로 고령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윤건영 교육감

6. [23.6~현재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아침간편식 공약 일방추진 반대 투쟁



23.6.12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급식팀 면담

23.6.15
아침간편식 일방추진 규탄 공동 기자회견

7. 충북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교육감 취임 1년

7. 충북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돌아보는 윤건영 교육감 취임 1년

-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최근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대응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 현장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윤건영 교육감 취임 후 업무분장 강제 등 달라진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이는 부당 대우 및 노동강요로 이어지고 있음
- ▶ 우리 충청도 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윤건영 교육감이 내거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